

“새만금신공항, 총력 대응해 지킬 것” 고속철도운행사 통합 논의

민주 전북 국회의원들
법원 1심 판결 강력 반발
“국책사업 본질·정책적
정당성 외면 결정 유감”

서울행정법원에서 행한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성운,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한병도 의원(순위 무순) 등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패소 판결은 “국책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새만금 신공항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대독한 이성운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첫째,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라환경영향평가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라환경영향평가서상 군산공항의 저위험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서천 갯벌 생태계 보존을 위한 비행 절차 변경안 등 대안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환경 영향은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지,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셋째, 비용편익분석 상 경제성 문제를 들어 사업 존폐를 결정한 것은 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든 공익을 계량화하려는 편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국가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같은 비계량적 공익 가치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넷째, 새만금 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새만금에 필수적인 항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잦아들만 재단하여 국가 미래 전략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결정적인 차질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미흡함이 있다면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책 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한병도 의원

은 “이번 판결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신청 심리와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우려했던 내용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집행정지 기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희승 의원은 과거 새만금 방조제 건설 관련 1심 패소가 2심에서 뒤집어진 성공 경험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호영 의원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과 환경 문제 보완 노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도당 위원장도 9월 11일자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이번 재판이 도민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염원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전북 도민과 뜻을 같이할 것임을

선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 도민과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뜻을 함께할 것이며, 180만 전북 도민의 힘을 모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했던 전북 발전 동력이 좌초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굳건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김운덕 국토부장관, 2차 간담회 하순계 개최

전북 출신인 김운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하순계 고속철도운행사의 통합 논의 위한 2차 간담회를 열고 각계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열차(SR)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운덕 장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필요한 절차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1차 간담회에 이어 2차 간담회를 29일 연다.

앞서 지난달에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철도노조가 참여 전문가들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각사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철도노조는 “간담회 참여한 외부 위



원 명단을 보면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차 간담회 불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운덕 국토부 장관은 “2차 간담회에는 양사에 통합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논점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코레일은 에스알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코레일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 등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수십년째 운행하면서 부채는 21조원을 넘어서 SR과 통합을 원하고 있다.

반면 SR은 철도운행사 경쟁을 통한 철도 요금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점에서 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두 정권에서 거버넌스분과위원회를 통해 철도통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유보했다.

/권희성 기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개발 ‘활력’

민주 윤준병 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일부 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던 농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해 사업 추진이 더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

체 간 ‘농촌 협약’은 이행실적 보고 절차가 불분명하고 해약 규정이 미흡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 기본계획만으로 특화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했다.

농지 전용 허가도 동시 처리해 행정 효율을 높였다. 또한 농촌 협약의 경우, 이행실적 보고 내용을 명시하고 매년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불이행 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크루즈 산업 활성화, 핵심 목표로”

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크루즈 활성화 용역 중간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항구 개항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크루즈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수행기관인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이 ‘전북 크루즈 기항 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나눴다. 이어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 우석대학교 이종원 교수, 네오렉스 박원형



사장, 도 해양항만과 김병하 과장 등이 발제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임 원장은 △동북아 크루즈 산업 현황 △국내 크루즈 산업 현황 △크루즈산업 지원 정책연구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차별화된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비자 면제 등을 통해 전북 자치도의 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제

안했다.

김이재 대표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만큼,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관광 다변화를 위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중간보고 및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전략이 정책에 담겨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는 김이재 대표의원과의 김정기 연구 책임자를 중심으로 김동구·김대중·김만기·나인권·서난이·이병도·임종명·이병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지난 8일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면밀히 점검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이 상정 전,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 결과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나서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조성 현장 등 방문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조성 현장을 방문해, 2027년 개소 때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남원시민들이 찾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하천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공원 조성 등 시민 커뮤니티 공간 정비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경제농정위원회는 시묘길에 위치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 추진 중



인 곤충산업과 디지털정밀재배 테스트베드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며, 갈색거저리 등 곤충산업의 판로 확보와 수익 창출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환경 정밀제어를 통한 재배기술 개발에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